
성장사다리 구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

2024. 5.

목 차

통계시스템 고도화

1. 중견기업 통계 및 통계시스템 예산 확대	1
--------------------------------	---

성장사다리 구축

2.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3
3.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5
4. 중견기업 육성정책 대상 확대	6
5.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8
6.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기존 공장 증설 허용	9
7. 기업 성장에 따른 R&D 연구과제 지속 지원	10

중견기업 구인난 해소

8.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12
9.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 참여 허용	13
10. 중견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공공주택 지원	14

목 차

투자 촉진

11.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16
12.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18
13. 중견기업 시설·설비투자 세제지원	20
14. 旣 지방 소재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	22
15.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자체간 상생방안 마련	23
16. 국내 복귀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	24

장수기업 육성

17. 상속 및 증여세율 인하	27
18.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29
19.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한도 확대	30
2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32
21.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33

통계시스템 고도화

1

중견기업 통계 및 통계시스템 예산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중견기업은 공급망 재편 등 산업 대전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핵심기업군이나, 중견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통계 및 데이터 분석 등은 미흡한 실정
- 중견기업 정책수립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23년부터 중견기업 통계시스템을 구축('25년말 완료 예정)하여 다양한 데이터 수집·DB화, 통계·조사 분석 보고서 제공 예정

<중견기업 통계 및 통계시스템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23년	'24년	'25년(요구(안))
중견기업 통계·조사	6.53	6.53	8.5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5.0	13.8	18.0
합계	11.53	20.33	26.5

-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 종료 이후('26년~)에도 시스템 운영(통계 데이터 관리 및 확대)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대 편성이 필수적
- 중견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가공을 위해서는 수출·투자·공급망 및 기업지원이력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나 現 예산으로는 데이터 구매도 제한적인 상황
- 중소기업의 경우 데이터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운영하고, 시스템 운영에 40억 원 이상 예산 편성*(데이터 구매비용 제외)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예산(억 원): ('22년) 42.2 → ('23년) 42.05 → ('24년) 42.05

□ 건의내용

- 중견기업 정책수립, 경영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조사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견기업 통계 및 통계시스템 예산 확대

성장사다리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14년 7월 중소 → 중견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중견기업법이 '23년 3월 상시법으로 전환
- 지난 10여 년 간 중견기업 수는 약 2배 증가('11년 2,743개 → '22년 5,576개) 했으며, 수출·고용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

연 도	중견기업 수(개)	매출액(조 원)	수출액(억 불)	종사자(만 명)
2019	5,007(0.7%)	782(15.7%)	936(17.3%)	149(14.3%)
2020	5,526(1.4%)	770(16.1%)	931(18.2%)	158(13.8%)
2021	5,480(1.4%)	852(15.4%)	1,109(17.3%)	159(13.1%)
2022	5,576(1.3%)	961(14.4%)	1,230(18.0%)	158(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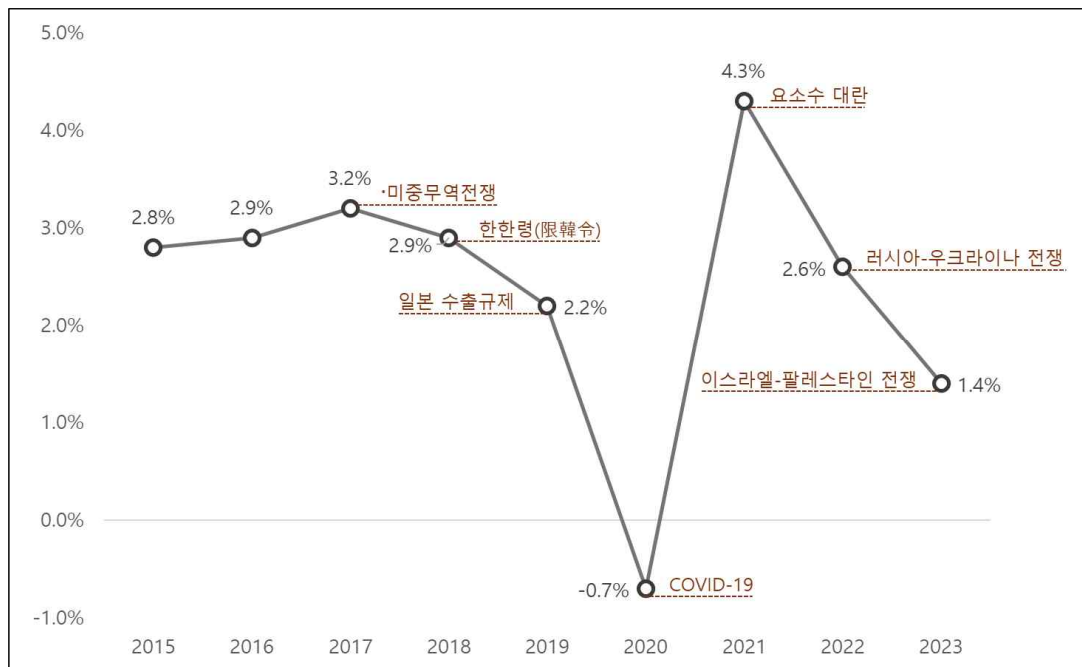
* [출처] 연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견기업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기업군으로, 산업생태계에서 대기업의 협력사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 허리 역할 수행

* 전체 제조 중견기업의 84.6%(1,683개사)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43개 중 53.5%(23개)가 중견기업(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23년 1월)

-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 및 역동경제 제고를 위해서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규모의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
- 현행 중견기업법('14년 1월 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ESG기준 강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중견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

< 우리나라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글로벌 주요 이슈 >



* '14~'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통계청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제환경 적응 지원과 성장지향형 정책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법 개정 추진 필요
 - 법 체계 개편, 특례 정비*를 비롯해 금융·세제·인력지원 등 중견기업 성장 전 단계를 아우르는 법·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 현행법에 따른 특례 대부분이 매출액 3천 억 미만 기업에만 적용, 글로벌 기업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례 발굴 필요

□ 건의내용

-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세제·인력지원 등 중견기업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한 중견기업법 개정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중견기업법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벗어나 경제위기 대응의 버팀목을 수행할 중견기업의 역할론이 부각 되면서 입법화
 - 중견기업법*에 의거, 지자체는 중견기업정책 수립·시행 및 이를 위한 예산·인력배분, 조례 제정 등의 책무를 규정
 - * 중견기업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맞춰 지역경제 특성 등을 고려한 지자체의 맞춤형 육성책이 가능토록 유기적 연계가 필요
 - 하지만 17개 광역 단위 지자체 중 조례 제정 지자체는 3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이 어려운 실정
 - * 부산(2016), 전남(2020), 충남(2021)
 - 또한, 지자체의 기업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위주 운영* 중으로, 중견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역 중견기업 육성책은 전무한 실정
 - * 지자체별 전용 지원사업 수(금액) : 중소기업 1,134개(18,372억 원) ↔ 중견기업 0개(0억 원)
 - * A시 기업지원과장 : A시는 중견기업 관련 지원 근거가 없어 중견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 및 사업 수립에 애로 (‘23.2.8, 중견련-A지자체 업무회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중견기업 지원 조례 제정 필요
 - 지방 중견기업 육성은 ‘투자·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 세수증대·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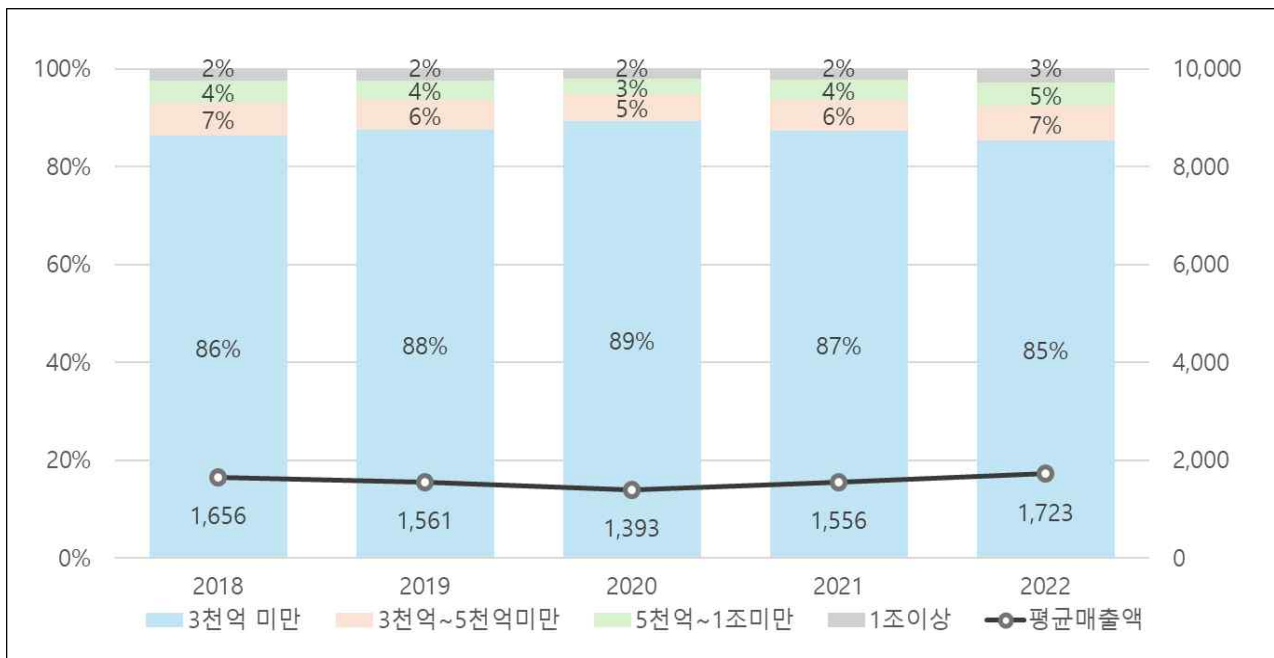
□ 건의내용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 → 중견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
 - 그러나 대다수의 지원정책은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있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촉진에는 한계
 - * 중견기업법에 규정된 15개 지원정책 중 기술보호, 국외 판로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8개 지원정책은 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매출 3천억 원 미만)으로 제한
- 중견기업 육성정책으로 중견기업 수는 증가*했으나, 전체의 85.5%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질적 성장은 정체
 - * '18년 4,635개 → '19년 5,007개 → '20년 5,526개 → '21년 5,480개 → '22년 5,576개 (연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연도별 매출구간별 중견기업 비중 및 평균매출액(단위 : %, 억 원) >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규모'에 의한 차등을 두는 지원정책이 아닌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육성정책 필요
-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필수불가결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에 입각한 정책 마련이 시급
- * 세계 농기계 분야 시장점유율 : JOHN DEERE(16.1%, Top-tier) VS 대동·TYM·LS·아세아텍 (1% 한국 4대 기업)

< 세계 농기계 시장분야의 기업별 시장점유율 >

업체명	국가명	매출액	점유율(%)
JOHN DEERE	미국	약 56조	16.1
CNH INDUSTRIAL	영국	약 43조	9.4
KUBOTA	일본	약 25조	8.2
⋮	⋮	⋮	⋮
DAEDONG, TYM, LS, ASIATECH	한국	약 3조	1.0

- 1억불 이상 수출 중견기업의 비중 확대('17년 5.0% → '22년 4.3%)를 위해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토록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 제도 마련 필요

□ 건의내용

- 글로벌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육성정책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일몰제로 도입('11년)되었으나, '17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 품목이 발생하자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생계형 적합업종법 제정·시행('18.12월)

*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중견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자제 권고(최초 3년+재지정 3년)

** (생계형 적합업종) 5년간 대·중견기업의 사업제한(인수·개시·확장 금지)하며, 위반 시 이행 강제금 부과(관련 매출액 5% 이내)

- 동일한 성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병존은 중복·과잉규제로 중견·대기업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침해

-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중견·대기업은 최소 12년에서 영구적*으로 사업 확장 또는 시장참여 불가

* (최소) 중소기업 적합업종 6년(3+3), 생계형 적합업종 6년 3월(심의 8~15월, 지정 5년)
(최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신청을 통해 영구 지정 가능

- 일부 적합업종 지정 품목은 소수 중기업에 혜택이 편중되고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

- 적합업종제도는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품질·가격 등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시킬 우려

* 적합업종제도와 유사한 고유업종제도는 중소 → 중견으로의 성장저해, 외국기업과 역차별 문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경제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2006년 폐지

□ 건의내용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폐지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
 -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졸업제 도입
 -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에 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라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은 첨단업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설 가능
 - * 권역별 중견기업(본사 기준, '22년 결산) : 수도권 3,596개(64.5%), 충청권 567개(10.1%), 동남권 612개(11%), 호남권 358개(6.4%), 대경권 339개(6.1%), 강원권 66개(1.2%), 제주권 38개(0.7%)
-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기존 공장을 증설할 수 없어 중견기업의 투자지연 또는 포기하거나 해외공장 설립 사례 발생

< 공장증설 관련 현장의 목소리 >

- A사는 전 세계적인 한식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생산 시설 증설이 필수적이거나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규제 및 환경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이 제한됨
 - 신성장 동력으로 HRM(가정간편식)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자 하나 생산시설을 증설할 수 없어, 높은 비용을 감내하며 위탁가공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
- B사는 중소기업의 폐업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등록하려 했으나, 이 경우도 공장 신설로 보고 규제하여 투자 포기

- 공장 신설시 증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역량 분산, 물류비용 증가, 효율성 저하 등으로 중견기업의 경쟁력 상실 우려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완화 필요

□ 건의내용

-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공장 증설을 허용하거나, 한시적 증설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책연구과제는 공모 절차 후 선정평가*를 거친 후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등에 따른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협약을 통해 진행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및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활용가능성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 旣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협약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평가* 및 특별평가** 등에 따라 과제 이행 중단이 가능

* 평가불량등급, 연구수행 지속가능 기준의 미충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 부정행위, 제재처분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 기업규모의 변경(중소→중견)은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년도 연구과제의 수행 중에서 지원이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 → 예산낭비 및 기업의 연구개발 차질

- R&D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일련의 평가결과를 통해 우수 역량이 입증된 중견기업이 성장을 사유로 협약기간 중도에 지원 배제되는 것은 국가혁신역량 제고에 역행

사례

- A사는 중소기업 지위인 '22년에 R&D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나 다음해 4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결과, 기업규모 지위변동에 따른 지원상실 판정을 받아 연구과제 중단 통보
- B사는 중소기업 당시 R&D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기업규모(중견)의 변경으로 연구개발과제 중단이 될 예정이었으나, 전담기관과 조율을 통해 계속 지원을 통보
 - 기업성장과 과제수행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지만 기업측의 소명활동 등 불필요한 행정 노력이 필요한 실정

□ 건의내용

-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연구과제를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견기업 구인난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 세제지원의 역진적 구조는 고용 창출 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모만으로 지원을 축소하여 효과가 작고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
 -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등은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단절**
 -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청년 취업자는 5년간 90%) ('26.12.31까지, 과세 기간별 200만 원 한도)
 - ** 중소 → 중견 성장 시 배제되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거나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졸초임의 72.0%*에 불과하여 구인이 어려운 상황
 - * [대기업 대졸초임] 5,084만 원(경총,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21.10월 [초기 중견기업 대졸초임] 3,663만 원(중견련,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공)
 - 또한, 구직자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은 타 기업군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인재영입 애로가 가중될 우려
 - * 기업 규모별 제조기업 비중(통계청 '23.12월 행정자료 기준) : 중소 17.4%, 중견 35.5% 대 17.3%
-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을 유인하여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

□ 건의내용

-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 * (예시)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3년간 소득세의 30% 감면(청년 등 50%)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장기재직 및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였으나, '21.9월 부터 참여대상에서 중견기업은 제외

* 대상 : ('16년) 중소, 중견 → ('20년) 중소, 중견(3년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21.9월) 중소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및 우수 인재 확보에 상당한 기여

* 청년층 입사 및 고용유지, 장기근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중견기업의 청년고용 변화와 일자리사업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2022년 12월)

-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8월
가입청년 수	5,217명	40,170명	106,402명	98,572명	137,226명	119,783명	54,124명
가입기업 수	2,788개	18,268개	45,703개	49,764개	54,973개	51,162개	29,503개

* 국회입법조사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22.10월

** 석·박사 가입 수 : ('16년) 74명, ('17년) 1,480명, ('18년) 4,326명, ('19년) 3,709명
(한국노동연구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실태 분석, '20.2월)

- 중견기업은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로 여전히 채용 애로를 겪고 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제외로 중견기업 인력확보 애로 가중

* 신규채용 애로 요인 : 적합한 인재 부재 46.9%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 19.0% 지방 소재 17.0% 순
(중견련,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23.12월)

** 인력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필요 사항 2순위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44.1%),
(중견련, 중견기업 인력 현황 조사, '23.6월)

□ 건의내용

- 중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임대주택 中 국민임대·행복주택*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
 - * 국민임대주택 :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 행복주택 : 정부의 재정이나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 한해 공급의 20% 내 우선공급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中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 또는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공급의 90% 내 우선공급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 중견기업은 근로복지, 사회적 평판 및 고용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과 큰 차이가 없으며 재직자의 이직 의사가 높은 실정
 - 청년층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필요
 - * 중견기업의 청년고용 변화와 일자리사업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2022년 12월

□ 건의내용

-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을 중견기업 까지 확대

투자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R&D 및 설비투자,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경우 대다수의 세제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또는 5천억 원 미만으로 한정

<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

중견기업 범위	세제지원 내용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 상속세 연부연납, 특허보세구역 특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R&D·투자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경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기술이전 세액공제 등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 지원 등 -(기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제지원을 매출액에 따라 재차 축소하는 것은 성장 기피를 유발하고 중소기업 → 중견 →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의 단절을 심화

- 중견기업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1순위는 조세부담이며, 실제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중소기업(14.4%)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18.4%), 상출집단 소속 기업(19.2%) 보다는 높은 수준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 **조세혜택 61.6%**, 금융지원 15.7%, 판로규제 20.0% 順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법인세 실효세율('21년 신고기준) : 전체 18.4%, 상출 19.2%, **중견 19.6%**, 중소기업 14.4%, 기타 21.7%(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 중견기업 세제지원에 대한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여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6%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차등지원 폐지가 시급

<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현황(%) >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 등)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추가공제한도) 기본공제액의 200%
	중소	중견	그 외		중소	중견	그 외	
일반연구개발	25	8~15	2	중소 50, 중견 40, 그 외 25	10	5	1	3
신성장·원천기술	30~40	25~40	20~30		12	6	3	3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30~40		25	15	15	4
중견 적용범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중견기업은 '23년 경기불황에도 R&D 및 설비투자가 각각 9.4조 원, 29.5조 원, 고용인원 158.7만 명 등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군으로 매출액 기준 폐지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및 실태조사, 중견련

□ 건의내용

- (1안)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 (2안)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폐지
 - (현행) R&D: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시설투자: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건의) 전체 중견기업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당기분)) 중소 25%, 중견(5천억 원 미만) 8~15%, 대기업 최대 2%
(신성장·원천기술) 중소 30~40%, 중견 25~40%, 그 외 기업 20~30%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지원 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대다수(91.5%)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견기업 구간 적용이 어려운 상황
 - *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434개 사(7.8%) (산업부,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핵심성장 BIG3 산업 중 자동차 업종 중견기업은 코스닥기업이 12.0%(31개사)에 불과하며, 바이오 업종도 코스닥(27.2%, 25개사)보다 유가증권시장(35.9%, 33개사) 비중이 높아 제도 이용이 가능한 중견기업이 소수
 - * 자동차 중견기업 상장현황 : 코스피 12.0%, 코스닥 12.0%, 비상장 76.0%
바이오 중견기업 상장현황 : 코스피 35.9%, 코스닥 27.2%, 비상장 37.0%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

< 중견기업 R&D 투자 추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
R&D 투자금액 (억원)	77,213	84,443	94,102	94,269	96,296

* 중견련, 중견기업 기본통계(각 연도별)

- 그러나, 중소 → 중견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차에 따라 축소되어 R&D 투자 확충에 애로가 있으며, 최저한세*도 적용되어 공제금액이 줄어들고 지속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최저한세율 : 중소 7%, 중견 1~3년 차 8%, 4~5년 차 9%, 그 외 중견·대기업 10~17%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
 - R&D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 → 중견 성장사다리 구축 및 중견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촉진하고, 민간 중심 R&D 투자 기반 마련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5% 상향 시, 매년 8조 8,481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이 각각 138,187명, 99,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원천 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익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 유사 입법례 :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는 중견기업 지원 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으로 적용

□ 건의내용

-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진입연차별 세액공제율 상향
 - * (1~3년차) 15%→20%, (4~5년차) 10%→15%, (6년차 이상) 8%→13%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 조세특례제한법 내 세제지원 중 상장시장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유일
-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 *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 10%, 중견 5%,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공제율 상향*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중소기업 12%, 중견 6%, 그 외 기업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중소기업 25%, 중견 15%, 그 외 기업 15%

- 민간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한시적('23년)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하여 시설 종류에 따라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12~25%, 중견 7~10%, 대 3~6%를 공제(추가공제 10%)

-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되면 설비투자가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시 중견기업의 투자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대한상공회의소,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23.2월: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시(대·중견 7%, 중소기업 9%) 설비투자 증가율: 대·중견 59%, 중소기업 38%

- 특히, 중견기업은 투자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된 이후 타 기업군에 비해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해 정책 실효성이 큰 것으로 추정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연도 투자 증가율('23, KDB): 대 -5.3%, 중견 9.8%, 중소기업 5.8%

- '23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高로 경제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 1.3%를 기록했으며 이는 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등에 이어 역대 여섯 번째로 낮은 수치

- '23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24년 대기업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위축된 투자심리 해소에 주효한 것으로 추정

<기업 규모별 설비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

구 분	금액(조 원)			증가율(%)	
	2022	2023	2024(계획)	2023	2024(계획)
대 기 업	179.5	170.0	175.1	△5.3	3.0
중견기업	30.1	33.0	34.4	9.8	4.3
중소기업	14.0	14.8	15.8	5.8	6.5

* KDB산업은행, 2023년 설비투자계획조사

- 장기적인 투자 확대를 유인하고, 다소 개선된 투자심리를 견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필요

□ 건의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지원 확대
 - (공제율 상향)
 - * [일반] (현행) 중소 10% 중견 5% 그 외 1% → (건의안) 중소 12% 중견 7% 그 외 3%
 - [신성장원천기술] (현행) 중소 12% 중견 6% 그 외 3% → (건의안) 중소 18% 중견 10% 그 외 6%
 - [국가전략기술] (현행) 중소 25% 중견 15% 그 외 15% → (건의안) 중소 25% 중견 20% 그 외 15%
 - (대상확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전체 중견기업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3년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기업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
 - 각 지자체별 신규기업(수도권 이전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
 - * 토지매입액 지원 등 보조금 확대,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감면 등
- 신규유치기업에만 해당되는 투자 인센티브 등의 지원정책*은 수년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既 투자기업의 소외감 야기
 - * 산업단지 분양공고에 따르면 신규 유치기업에 한해 선정기준 우선순위 또는 가점부여

< 산업단지 분양공고 상 역차별 내용 >

구분	분양공고	공고일	주요내용		
순위 차별	나주혁신산단	'24.1.5	<1순위> 수도권 이전기업	<2순위>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3순위> 협력업체 등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23.12.22	<1순위> 외투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2순위> 수도권 이전기업	<3순위> 그 외 업체
평가 차별	세종테크밸리	'23.12.29	수도권이전기업(100점), 외투기업(100점) 국내복귀기업(50점)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상 산업단지 분양공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유치기업 뿐 아니라, 지역 내 기존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육성·지원책 필요

□ 건의내용

- 既 지방소재기업이 투자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역 내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신규 유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 투자 인센티브 마련
- 기존 지방소재기업의 공장 신·증설 투자시, 산업단지 우선 분양

□ 현황 및 문제점

- 급변하는 대내·외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중견기업의 신속한 투자집행은 첨단산업 등에 있어서 '경쟁력 확보'의 중요 요소
 -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서는 전력, 용수 등의 공급이 필수
- 그러나, 님비현상*으로 인해 지역 주민 및 인근 지자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기업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지역주민이 치안, 환경, 정서 등을 이유로 각종 혐오시설의 유치를 거부하며 집단 행동을 하는 현상

< 님비현상의 대표 사례 >

- 용인 일반산단 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설치에 여주·이천·용인시의 11개 인허가 필요 → 여주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산단 조성 3년 지연

- 기업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인접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이기주의 해결 필요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인접 지자체간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간 계약을 통해 비용·혜택 등 협의로 문제 해결
 - * 미국 사례: 포토맥강 수질 유지를 위한 하수처리설비설치를 위해 인근 3개 주 간 계약체결 → 하류 인근 지역이 대부분 부담하던 수질 유지 비용 분담

□ 건의내용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간 상생방안 마련을 통해 님비현상 해소
 - 협조 지자체에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 투자 수혜 지자체의 지방법인소득세를 협조 지자체와 공유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13년부터 유턴기업 지원 제도를 운영 중
- 유턴기업이 국내사업장 투자시 산업단지 및 지자체 입주를 지원하고 투자보조금, 이전보조금,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지원
- 투자보조금(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의 경우 지역별 지원비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지원

투자보조금 기본 지원비율

	기본 지원비율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지원우대 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일반업종	21%	-	21%	24% (지역가산+3)	34% (지역가산+13)	44% (지역가산+23)
우대업종	23%	-	23%	26% (지역가산+3)	36% (지역가산+13)	46% (지역가산+23)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44%	11%	44%	47% (지역가산+3)	48% (지역가산+4)	49% (지역가산+5)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45%	26%	45%	48% (지역가산+3)	49% (지역가산+4)	50% (지역가산+5)
국비보조비율		40%	45%	65%	75%	75%

* 산업통상자원부·KOTRA, 「2024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유턴기업 가이드북」, 2024.

- 각종 지원제도 중 투자보조금은 가장 기대하는 혜택이나, 매칭 비율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에 따라 보조금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아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사례

- 2021년 첨단업종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C社は 24년까지 수도권 소재에 약 1,000억 원의 국내복귀 투자를 예정한 상태로 설비투자금액(367억)의 최대 17%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복귀지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이유로 설비투자금액의 1.96%인 약 7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

□ 건의내용

-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이 지자체별 재정여력에 따라 상이한 실정으로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 필요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투자의 적시성 확보 및 국내 R&D 투자 확대, 고용 창출 효과 견인

장수기업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도해 기업을 승계하기보다 매각을 먼저 고려하는 상황 발생

<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국가
55%	일본	30%	벨기에, 독일	10%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50%	한국	25%	칠레	7%	폴란드, 스위스(칸톤 레벨)
45%	프랑스	20%	그리스, 네덜란드	4%	이탈리아
40%	영국, 미국	19%	핀란드	0%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34%	스페인	15%	덴마크		
33%	아일랜드	14%	슬로베니아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1년 상속세수는 6조 9,447억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452% 증가했으며, 전체 세수 대비 비중도 지속해서 상승¹⁾

* 상속세액 및 세수 비중(억 원(%)): ('11) 12,586(0.7) → ('16) 19,949(0.9) → ('21) 69,447(1.9)

- '20년 기준 명목 GDP 대비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0.5%로 OECD 평균인 0.1%의 다섯 배에 달하며,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상속·증여세 부담률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

* 주요국 명목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21년 기준, 2023 대한민국 조세)

: 프랑스 0.7% 한국 0.7% 일본 0.5%, 독일 0.3%, 영국 0.3%, 미국 0.1%, OECD 평균 0.2% 등

-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

1) '22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19조 2,603억 원으로 '2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증가 폭이 훨씬 크게 도출되나, 해당 연도는 삼성전자 오너 일가 상속세 결정세액(12조 원)을 포함하여 급증한 것을 고려해 추이에서 제외

< OECD 회원국 상속세 비교 >

상속세 유지 국가(23개국)	상속세 폐지 국가(15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취득세(19) :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유산세(4) : 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미국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비과세) 슬로베니아 (배우자 및 직계가족 비과세)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이득세(4)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추가소득세(3) :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비과세(7) :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인지세(1) : 포르투갈(직계가족 면제)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 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낮추고, 납세자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등을 도입하여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할 필요

* 전체 유산에 과세하지 않고, 유산을 상속인 수로 나눈 뒤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는 방식

- 호주는 '77년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으며, 스웨덴도 자국 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영국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자본이득세를 도입

* '84년 스웨덴 제약회사 아스트라AB가 당시 높은 상속세 부담(실효세율 70%)으로 인해 영국의 제네카에 회사를 매각

□ 건의내용

- (1안)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15%) 수준으로 인하

* 전체 상속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2안) 상속 시점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 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

* 상속세 전반에 대해 일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 기업을 이전하는 승계에만 자본이득세 방식을 선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 20%를 할증평가 (단, 중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제외)하여 상속·증여세 부과
 - *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고려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은 최대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
 - *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 할증평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최대 60%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어려움
 - * 기업승계 시 애로사항 :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 62.4%, 엄격한 기업승계 요건 7.8%, 복잡한 지분구조 7.5% 순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특히, 상장기업은 평가기준일*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평가액만큼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승계 후 최대주주의 지분을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의 우려가 존재
 -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의 시가(時價)에 따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건의내용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

** 업력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오랜 기간 가업을 영위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 제도 활용이 불가능

< 제조업-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 >

광업 (05~08)	제조업 (10~33)	건설업 (41~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교육서비스업(85)
전체	전체	전체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등 5개 업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등 7개 업종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등 4개 업종

- 특히, 서비스업은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 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사는 인력 도급 관련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하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사업체와의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통해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라인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음(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에 해당) - 그러나 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단,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고용알선업(75110)" 등 일부 부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으로, 유사·동종사업("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에 어긋남 - 리조트에 속해있는 골프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가업에 해당하지만, 일반 골프장은 관광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이 제한되어 가업상속공제 활용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제도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

-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5,200억 원*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30%로 가정해도 상속 규모가 1,560억 원에 달해 가업상속공제 활용 없이 원활한 승계가 어려움

*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기업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평균 자본총액('22년 결산 기준)으로 같음

<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평균
한국	가업상속공제 건수(개)	46	58	70	68	67	76	91	103	88	74
	가업상속공제 금액(억원)	325	343	933	986	1,708	3,184	2,226	2,344	2,363	1,601
독일	가업상속공제 건수(개)	5,123	6,124	8,061	10,141	11,085	11,885	10,747	10,311	11,368	9,427
	가업상속공제 금액(백만유로)	4,412	3,733	3,713	6,439	4,753	5,208	6,881	4,029	3,047	4,691
영국	2011-2018년 평균 2,620건, 1,801백만파운드										

* 코스닥협회,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 '21.5월

-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중견기업 및 한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승계기반 조성 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

*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기업당 291.1명을 고용하는 데 반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833명을 고용(중견기업 통계, '22년도 결산 기준)

□ 건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 규정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 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중견기업 확대

- (현행)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건의) 전체 중견기업

-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 (현행) 최대 600억 원 → (건의) 최대 1천억 원

□ 현황 및 문제점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 상속 대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나 저율과세(10%)는 120억 원이 한도
 - * 각 과세표준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10억 원 이하 0%, 5억 원 초과~120억 원 이하 10%, 120억 원 초과~600억 원 이하 20%, 600억 원 초과 50%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대다수는 경영노하우 및 기업가정신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
 - * 주된 가업승계 방식(중소기업중앙회, 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
: 일부 증여 후 상속 58.9%, 생전 증여 32.2%, 사후 상속 7.1%, 기타 1.8% 順
- '22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저율과세는 120억 원에 불과해 제도의 실익이 부족하며, 실제 조세지출 규모도 상속보다 저조
 - * '23년 조세지출 전망(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가업상속 3,717억 원, 증여 1,198억 원
 - 특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가업상속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행 저율과세 규모로는 과세특례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
 - * 중견기업 상속세 예상세액(중견련, 2016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 100억 원 이하 23.5%, 300억 원 이하 26.5%, 500억 원 이하 14.7%, 1,000억 원 이하 11.8%, 1,000억 원 초과 23.5%
- 기업의 영속을 통해 국부를 이전하려는 입법 취지가 동일한 만큼 상속과 증여 사이의 차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승계 환경 조성

□ 건의내용

- (1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상속과 동일하게 공제로 확대
- (2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 (현행) ~120억 원 10%, 120~600억 원 20% → (건의) ~600억 원 10%

□ 현황 및 문제점

- 금전, 유가증권, 토지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사는 연부연납 제도 활용에 애로

* 금전, 유가증권, 납세 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 비상장주식은 부동산 등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과세당국에서 물납 주식의 부실화를 우려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한 탓에 실질적으로 허가받기 어려운 상황

* 국세청, 캠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 운영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관리

- 비상장 중견기업(83.1%)*은 세 부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 경영권 위협 우려

* **비상장 4,647개(83.3%)**, 코스피 450개(8.1%), 코스닥 475개(8.5%), 코넥스 4개(0.1%)

-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납세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정책의 일관성 결여

-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홍석준 의원안, 의안번호 제2104118호)

□ 건의내용

-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용

* 비상장주식 납세담보 허용 기준 별도 마련

(예시)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불성실 납부 이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